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이달 말까지 신고… 실질적 소유자도 대상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만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30일까지 세무서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정보는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이다.

신고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이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내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 측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으니 성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코로나 산발 피해 시 기한연장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의 증여세 대상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 19 및 동해 산발 피해 등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8월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예상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에 안내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 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피해자 등이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세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100채 상속받아도 1주택 행세… 정부, 상속주택 종부세 면제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주택을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기한을 늘리고 상속주택 수도 제한을 걸지 않 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수 제한을 하지 않으면 100채를 상속받아도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면 상속주택에 한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셈이라서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구매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제외기간, 적용 주택 수, 적용주택 가격, 적용주택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에 대해 “오는 7월 말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까지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상속주택 등 종부세 주택 수 제외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둘러 체납 정리 하세요”…관세청,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

관세청이 관세 등 조세 및 과태료와 과징금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부터 7월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